

인력 부족에...안전 위협받는 119수상구조대

전남 41개 유원지에 93명 배치...1곳 당 투입 인력 2.2명 불과 위험한 구조활동에 소방관 사망도...인력 확충·장비 개선 시급

‘구례군 피아골 계곡에서 피서객을 구하려던 청년 소방교가 소방 장비인 안전줄이 끊어져 숨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관 장비가 이렇게 허술하고 부실할 수 있는 겁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일 올라온 글로, 청원인은 ‘소방관들에게 지급되는 장비들의 안전성을 확보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정부에 청원했다.

여름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휴가지에서 운영중인 ‘119수상구조대’의 인력 부족으로 피서객 및 구조대원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소방센터와 119구조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여기에서 파견 형태로 이뤄지는 수상구조대 인

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구조 업무 뿐 아니라 구조대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소방관들의 희생을 잇따르면서 소방 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6월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이달 말까지 전남지역 41개 해수욕장과 강·계곡 등 유명 휴가지에 93명의 소방인력을 투입해 119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휴가철에만 수만~수십만명이 찾는 유원지 1곳 당 배치된 구조인력이 2.2명에 불과한 셈이다.

수상구조대가 구조 업무에 필요한 인력

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피서객 안전 관리 뿐 아니라 구조대원들의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장, 지난달 구례에서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린 피서객을 구하려다 숨진 김국환 소방관 사건의 경우 부족한 구조 인력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수난사고가 발생하면 계곡을 가로지르는 안전줄을 설치한 뒤 인명구조에 나서는데 일반적인 형태로, 이 때 구조대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 4명의 동료 구조대원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게 소방본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당시 출동한 수상구조대 인력은 김 소방관과 구례소방센터 소속 동료 등 고작 2명에 불과했고 인근 소방센터까지 거리도 25km에 달해 추가 구조 인력이 오는데 30분 가량 걸려 자칫 ‘골든 타임 내 구조’가 어려워질 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김 소방관은 이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일반 로프에 결박하고 물에 뛰어든다가 변을 당했다.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상구조대에 구조 인력 외에 자원봉사자·의용소방대(68명)가 지원되지만 상시 근무자가 아닌데다 사실상 구조가 아닌, 순찰·계도 업무만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구조 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 소방센터와 119구조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수상구조대로 파견 보내는 인력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소방본부 설명이다.

전남지역 소방대원의 경우 2400명(2017년)→2740명(2018년)→3120명(2019년) 등으로 2년 간 30%의 인력 늘여왔고 올해도 533명의 인력을 새로 충원할 계획이지만 지역 소방센터와 119구조

대, 산악구조대 등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인력 뿐 아니라 구례 구조 사고를 계기로 소방 장비 개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관들의 장비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는 청원글에는 140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소방관이 업무 중 사고 당하는 일은 없도록 소방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관! 이제는 나라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라고 썼다.

순천소방 관계자는 이와관련, “구례 구조 당시 사용된 로프는 부력이 높고 인장력도 1.1t으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장비”라며 “구조 과정에서 로프 단면이 날카로운 철 구조물에 긁히면서 절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늘 검찰 고위간부 인사

추미에 장관 두번째 인사 주목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가 오는 7일로 확정됐다. 지난 1월에 이어 추미에 법무부장관의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6일 오후 3시 정부과전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회의는 두시간가량 진행된 뒤 오후 5시께 끝났다. 인사 결과는 오는 7일 발표되고 부임은 11일자로 이뤄질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이창재 변호사는 인사위 시작에 앞서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우대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46명) 자리 배치에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자리다.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은 2-3석 비워둘 수도 있다.

/연합뉴스

북구 의원들 불법 수의계약 의혹 수사 착수

광주경찰, 북구청 공무원 입건

경찰이 북구의회 의원들의 불법 수의계약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불법 수의계약 관련, 북구청 공무원 A씨를 직무유기·지방계약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A씨는 지방계약법과 경직 제한 규정 등에 기초의원 배우자 명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순선(무소속·나 선거구) 의원의 경우 배우자 명의 업체로 구청과 6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그는 기초의원인 뒤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바꾼 뒤 11건에 이르는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방계약법(33조 2)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미용(민주 비례)의원·이현수(무소속·가 선거구)의원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각각 수백만원 대 꽃을 구청에 납품한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한 조사 뿐 아니라 북구청 각 부서 계약 담당 전·현직 공무원, 북구의원 등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의 계약 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포괄 사업비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코로나 극복 동참 '지역 생산품 장터' 6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기업 및 농민들을 위해 광주 서구청 로비에서 열린 '지역 생산품 장터'를 찾은 구청 직원들과 시민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납품업체에 뇌물 받은 전남교육청 간부 구속

학교 교육시설 납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6일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학교에 교육시설을 납품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은 지난해 6월 도교육청과 암막스크린 납품 업체를, 지난 5월에는 도교육청 분청 시설과와 재청과, 나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A씨는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미 암막 스크린 납품업체 관계자와 알선업자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전남경찰은 이외 공무원 뇌물 비리 의혹과 관련, 전남도교육청 직속 목포공공도서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도교육청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사건이 어디로 확산할 지 주목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직원 성추행 사건 재조사하라"

"부실 조사로 피해자만 해고돼" 12개 광주 여성·시민단체 촉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12개 광주 여성·시민단체는 6일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은 회식 자리에서 부서 최상급자에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전남대는 학교 차원에서 사건

을 재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복직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에는 추행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학교 인권센터 측은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부실한 조사를 했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 신고를 했다고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을 보장받고자 찾아온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번 짓밟은 인권센

터는 그 명칭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전남대 산학협력단 소속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부서 회식에서 부서 상급자인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전남대측은 A씨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해고했다.

전남대 측은 이와관련, "성추행 사건 조사와 징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